

영산강환경청 “부영주택, 아파트 개발 규모 대폭 줄여야”

나주시, 공공기여와 별개 “1000가구 줄여야”...추진현황 시의회 보고 도교육청 “중고교 부지 내놔야”...시민들 “부영 미착공 용지 먼저 개발”

민선 7기 내 마무리 어려울수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변경과 관련해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모두 “현재 부영주택 착수사업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나주시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무부서인 나주시 도시과 역시 용도변경 적절성-공공기여 규모 등은 고려하지 않고 혁신도시 도시계획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부영주택 측의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24~28층, 5358가구)에서 최소 1000가구는 줄여야 한다는 자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 반발에 더해 관계기관과 승인기관(나주시)의 입장이 사업자 측 계획과 어긋난 것으로 드러나면

서 당초 민선 7기 안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던 부영주택 측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27일 전남도와 나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나주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영CC 잔여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관한 용도계획 변경 추진 현황’을 나주시의회에 보고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 측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우선 “혁신도시 내 개발밀도를 높이는 용도지역 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부영주택 측은 한국에너지공단 부지(40만㎡)로 기부하고 남은 자연녹지 용도의 골프장 잔여지(35만㎡) 전체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입장이나,

영산강환경청은 부적절하다며 보안을 주문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아울러 SRF(열병합발전소 등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현지조사(2개월 이상)를 거쳐 공동주택 입지 타당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완충녹지 확대, 건축물 층높이 하향, 약취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중·고교 신설부지를 사업자 측이 제공해야 한다고 공식 의견을 밝혔다. 기존 혁신도시 내 교육시설로는 신규 학생 배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사업자 측이 계획한 유치원·초등학교 외에도 중·고교 부지 3만㎡를 포함해 모두 4만5000㎡를 교육시설 부지로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에 전남과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도 했다.

나주시 체육진흥과는 신규 주택 개발에 따른 수요를 고려하면, 필수적으로 공공체육 용지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최소 8000㎡는 돼야 한다고 했

다. 시민 300여명도 의견을 나주시에 제출했다. 상당수 주민은 “과도한 특혜다”며 부영주택이 보유한 혁신도시 아파트용지(C6블럭, 6만6000㎡ 2종 일반주거지역)를 교육시설 용지(과학교) 등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는 아파트 개발보다 공원·녹지 조성이 우선이라며 “부영주택이 소유한 미착공 아파트 용지(C6, C7 등 2개 필지 13만㎡)를 우선 개발하라”고 했다. 일반 시민 20여명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은 과도한 특혜로 자발적 사전협상제를 통한 공익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주시는 지난 21일 나주시의회 보고 자리에서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부서)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이와 같이 수렴했다고 밝히면서, 주무부서인 나주시 도시과 자체 의견도 함께 보고했다. 나주시 도시과는 우선 ‘나주시 혁신도시 도시관리계획 기준’ 과비교할 경우, 부영주택 측이 부영CC 잔여지에 계획

한 아파트 건설 규모는 자체 기준보다 약 1000가구 많다고 판단했다. 혁신도시 용적률 최고치인 175%, 평균인 162%, 최저치인 155%를 적용할 경우 각각 최대 4796가구, 4440가구, 4248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는 토지 용도변경 및 공공기여 규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환경부 나주시의원(진보당)은 “나주시가 더는 사업자 측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나주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게 공공기여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및 나주시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부동산 이슈인데, 시민사회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사업자 측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절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절차가 민선 7기 안으로 끝나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음섭 광주시장이 27일 오후 시청 충무시실에서 재해·재난 등 비상시 공동대응을 위한 ‘민·관·군·경 통합드론영상 시스템 구축 협약식’을 갖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민관군경, 드론영상공유 재난 공동 대응

전국 최초...플랫폼 구축

광주 민·관·군·경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드론 영상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7일 오후 시청 충무 시실에서 국가정보원 지부, 육군 31보병사단, 광주경찰청, 공군 1전투비행단, 소방본부, 331 군사안보 지원부대, 민간 드론 운용단과 드론 영상 공유 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시스템은 광주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관제센터를 두고 활용용 센서를 장착한 드론이 현장에서 즉시 날아가 실시간 영상을 시 종합상황실에 전송하는 형태다. 테러·재난·통합방위 사태 등 국가 위기 상황, 지진·산불 등 자연재해, 각종 사고 대응 효율을 높여려는 것이다.

참여 기관들은 지난 3월 통합방위 회의에서 드

론 운용 능력,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영상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회의, 협업 태스크포스 논의에서 구축 방안, 기관별 보안 사항, 사전 허가 사항 등을 정비했다.

기존 분야별 시스템을 활용해 통합관제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신규 시스템 구축보다 예산 4억 5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이음섭 광주시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각종 사고 등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가장 큰 책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절실히 깨달았다”면서 “이번 협약이 광주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고, 국가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울 겨울 이른추위 폭설’ 예고 광주시 재난피해 최소화 대책

광주시가 올 겨울 이른 추위와 잦은 폭설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종 재난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11월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 사전대비 실태 자체 점검을 실시해 비상근무체계와 기관별 협업대응 체계,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취약계층 관리체계, 시설별 안전관리 대책, 지역·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저설 대책, 예방 중심 홍보 및 자발적 저설 참여 활성화 계획 등을 중점 확인한다. 또 2020년 겨울철 대설·한파 최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확보한 인센티브 5억원을 포함한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투입해 자동 저설장치 추가 설치, 저설자재 및 장비 현대화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대중 정신 계승 국제행사 전남서 첫 개최

목포서 김대중평화회의 열려

전남도와 김대중평화센터가 27일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2021 김대중평화회의 개최식을 갖고 28일까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평화·민주·인권 정신을 계승하는 국제행사가 전남에서 처음 열린다. 개최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축하메시지와 영상을 보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신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셨던 길은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평화의 길이 되 계속해서 새로운 길로 이어져 ‘김대중평화회의’라는 소중한 결실을 만났습니다”며 “김대중평화회의가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길을 탄탄하게 다져 주길 기원한다”고 첫 회의의 시작을 축하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김대중평화회의를 통해 한

반도와 세계의 인권과 평화를 증진하는 좋은 열매를 맺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세상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양심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되새겼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대등을 추구해야 한다”며 화해와 공존을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개최 기조연설에서 “김대중 평화회의를 통해 세계적 지도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평화·민주·인권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대중평화회의의 첫날인 27일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사나나 구스만 동티모르 전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화해와 연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수소산업 중심지 도약 역량 결집

TF팀 첫 회의...유관기관 협력

전남도는 ‘전남 수소산업 육성 TF팀’ Kick-Off (Kick-Off) 회의를 지난 26일 도청에서 갖고, 수소경제시대 에너지대전환 정책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전남 수소산업 육성에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전남 수소산업 육성 TF팀’은 지난 8월 수소산업 분야 관련 도 본청 11개 과 14개 팀, 3개 유관기관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선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남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패할 중점 추진사업을 살피고, 정부

소관부처별 수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실패 및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TF팀은 앞으로 수소산업 전주기 생산-저장-운송-활용 분야와 함께 연구개발(R&D), 기업 유치, 정책 지원 등 7개 분과 16개 세부과제를 발굴해 수소산업 육성 정책 및 소비 활성화 대책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생산 분야에서는 ▲도내 수소 산업체와 유망기업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개발 등 8개 과제를 실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www.kilf.re.kr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세·지방재정 개혁방안 공동 학술행사

주최 |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일시 | 10월 29일(금) 14:00~16:30 | **장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YouTube | 한국지방세연구원 | 유튜브 채널 실시간 중계

토론 및 질의응답

- 조임근 (한국지방재정학회 학회장)
-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
- 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
-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
-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강국진 (서울신문 차장)

개회사

- 백재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좌장

- 박 훈 (한국지방재정학회 학회장)

주제 발표

[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세·지방재정 '4080' 개혁방안

-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